"최순실 사익 위해 권력 남용…국정농단 은폐 지속"

헌재 결정문 탄핵 사유 핵심 근거

검찰·특검 대면조사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 거부 헌법수호 의지 없어
세월호 참사는 심판 판단대상 안돼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의결서상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이수(64·연수원 9기), 이진성(61·연수원 10기)은 재판관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부여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늦어도 오전 10시께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공백' 60일 국정 비상

안보·경제 등 황교안 대행 체제
대국민담화 "갈등·대립 마무리"

대통령 궐위사태로 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만일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먼저 챙겼다.

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민스타'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출근길 머리 헤어롤 화제…전남고 출신 김이수 재판관 권한대행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내려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정문을 20여 분간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파면을 선고한 이 권한대행을 '스타'로 치켜세웠다.

네이버 아이디 'chy8＊＊＊＊'는 "저렇게 긴 문장을 읽으면서 한 번도 더듬지 않았다. 대단하다"고 적었다.

이 권한대행이 이날 아침 실수로 헤어롤을 머리에 꽂고 출근〈사진〉한 것에 대한 반응도 이어졌다. 가수 윤종신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에 이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뭉클했는지. 재판관님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아름다운 실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적었다.

'pcj＊＊＊＊'는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이 시사하는 의미는 급하고 중대하면 머리를 올리다 말고라도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대행은 13일 퇴임한다. 이에 따라 후임 헌재소장 대행은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김이수 재판관(64·9기)이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의 헌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고창 출신인 김 재판관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 남부지법 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지냈다.

경찰은 당분간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등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여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